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공백사태 우려

더민주-국민의당 의장선거 등 원구성 놓고 신경전 치열

“국회식 배분” vs “자율투표”... 의사일정 차질 불가피

4·13 총선 전후로 양당 체제가 된 광주 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측 의원 간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다.

오는 8월 후반기 첫 회기 시작과 함께 의장부터 선출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돼 의장 공백사태가 우려된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4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시의회는 애초 5일까지 의장단 후보 등록, 6일 의원별 상임위원회 배정 희망서를 받아 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후반기 첫 회기에 원 구성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일정 합의부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한 더민주 측은 의석수에 따라 의장, 상임위원직을 나누는 ‘국회식 배분’을 주장하며 국민의당 측에 원 구성 협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의사일정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더민주 의원이 13명으로, 국민의당(8명)과 무소속(1명) 의원을 합친 것보다도 많지만,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의장 당선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회식 배분’을 놓고 더민주 측 한 의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의 호남 지방의회는 그동안 일당 독점체제이다보니 의석수에

다른 ‘국회식 배분’이 없어 생소할 수 있지만,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회는 거의 대부분이 ‘국회식 배분’에 따른 원 구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측은 “최근 원구성을 마친 전남도의회와 전북도의회도 ‘국회식 배분’이 아닌 의원들 간 ‘자율투표’로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다”면서 ‘국회식 배분’에 따

른 원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더민주의 ‘원 구성 합의 전 의사일정 거부’ 방침에 따라 4일 열릴 운영위에서 의장선거 일정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 소속인 전반기 의장이 8일 의장선거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의장 선출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요건을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과반을 차지하는 더민주 측이 의장 직권으로 일정 결정 시 본회의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더민주 13명 가운데 이탈 조짐을 보인 4명도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해당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투표 참여에 부담이 따른다. 결국, 의사일정이 미뤄져 의장 공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정 관계자는 “양측에서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의장, 상임위원장 등 자리싸움”이라며 “어느 한쪽의 극적 양보가 없다면 대립상황이나 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빛고을공예창작촌 개관

지난 1일 오후 옛 대동동초교에 자리한 빛고을공예창작촌 개관식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이 공예품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5개 선정

참여·소통·신뢰 자치구현

1차년 4억5000만원 지원

광주시는 주민 자발적 조직인 ‘광주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광주정신을 기본으로 참여와 소통, 신뢰와 평등의 생활자치를 구현할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 시범동을 5개 선정했다.

선정된 시범동은 동구(산수동), 서구(금호2동), 남구(월산5동), 북구(운암3동), 광산구(우산동)이다.

자치구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는 광주형 모델 구현을 위한 타당성, 지역공동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의지 등을 평가해 시범동을 선정했다. 앞으로 시범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조직 최상위에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며, 마을발전계획 수립, 음식물쓰레기

절감, 주민자치센터 직접 운영, 마을 신문 발간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광주시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재구성, 자발적 주민조직, 신뢰와 연대의 중간거점역할 수행, 협의·수탁사무 및 주민자치사무 수행을 위해 각 시범동에 9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2017.7.~2018.6.)에는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는 추진 단계별 문제점 등을 개선해 대상 선정 시 올해 참가 신청해 탈락한 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 구현을 통해 자치와 혁신의 자발적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자치의 권한을 행정기관 의존에서 벗어나 주민중심으로 이동해 지역사회 강화를 통한 전진적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최희종기자 chae@

전남도, 고령화 대비 ‘새로운 도시모형’ 추진

국토연구원·전문가 참여

압축도시 모델 간담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직면한 전남의 중소도시, 읍면소재지 대부분이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5일 열렸다.

전남도는 3일 “5일 도청 수리채에서 국토연구원과 도, 시군 도시계획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도시모형’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읍면 소재지, 지방도시 대부분은 인구 감소, 고령화, 도시 공동화로 도시가 계속 쇠퇴하고 있어 에너지 과다 소비, 재정 악화, 주민생활 불편 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시 공간구조를 집약화하고 편의시설을 재배치하는 새로운 도시모형 개발이 시급

다는 지적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도시모형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압축도시란 농촌 읍면 중심지 300m 이내에 행정, 의료, 금융, 교통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고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 300~500m권에 인구 거주 비율을 높여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간을 배치한 도시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의 구형수 박사가 ‘지방 중소 도시의 압축도시 추진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전남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모델을 제시한다. 또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일본의 압축도시 개념과 사례’ 발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수사례로 추천한 도야마시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 7만5462ha ... 전국 최대

전남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험 가입 기간인 지난 4월부터 6월 24일까지 도내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7만5462ha이다.

전국(24만6825ha)의 31%를 차지해 가입면적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었다. 이는 지난해(4만8000여ha)보다 무려 2만7000여ha(57%)가 늘어난 것으로 대상 면적 10만6000ha의 71%가 보험에 가입했다.

시군별로는 고흥, 장흥, 강진, 영광 등 주로 해안지역에서 높은 가입 실적을 보였다.

벼 보험 가입이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으로 ‘무사고 환급제도’(무사고 시 농가가 년 보험료의 70% 환급)가 도입되고 전남도의 적극적인 가입 홍보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시군별 회의를 개최하고, 가입 기간을 당초 5월 말에서 6월 24일로 연장을 건의해 관철했다. /이종형기자 golee@

광주 서·남·광산구의회의 의장단 선거 치열

동구의회 의장 박대현의원

북구의회 의장 김상훈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구도로 진행 중인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가 치열하다.

광주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는 하반기 의장에 국민의당 박대현 의원과 더민주 김상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나머지 서구·남구·광산구 의회도 4~7일 의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동구의회는 지난 1일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박대현 의원을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국민의당 홍기열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박 의원은 더민주 소속 박중균 의원과의 경합에서 전체 의원 8명 중 6명의 지지를 받았다.

박 신임 의장은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박대현 의장



김상훈 의장

북구의회도 같은 날 열린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민주 김상훈 의원과 신수정 의원을 각각 제7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이병석 의원과 경합 끝에 전체 19명의 의원 중 12명의 표를 얻었다.

김 신임 의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구민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산구의회는 4일, 서구와 남구 의회는 7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경쟁하고 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4·13총선 호남의 선택은 유권자발 정계개편”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정치학회 학술대회 논문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30일 “4·13 총선에서 호남의 선택은 정당 간 경쟁구도를 조성해 유권자가 주권자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정당 경쟁구도 변화와 광주지역 유권자의 투표 결정 요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호남인들이 지역개발 등 세속적 가치와 민주개혁이라는 정치적 지향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독과점 정당체제를 양당 경쟁 체제로 바꿨다”며 “유권자발 정계개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을 선출할 때와 이번 총선 모두 ‘정당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지만 서로 다른 방식을 취했



민형배 구청장

다고 분석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은 광주 시장 후보 전락 공천으로 여론이 좋지 않았음에도 결국 안철수 신당과 통합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 ‘정당회귀성’을 보였다.

그러나 두 아담이 맞붙은 이번 총선에서는 호남민이 더불어민주당을 내치는 ‘배제투표’를 함으로써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했다고 민 구청장은 주장했다.

민 구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표를 준 유권자들의 투표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보니 기존 점수를 1로 봤을 때 ‘더민주가 싫다’ 요인이 2.99, ‘더민주 대표가 싫다’ 요인이 2.62인데 반해 ‘소속당이 좋다’는 1.15, ‘후보가 좋다’는 0.71에 불과해 더민주 배제심리가 강했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임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